

“3억 남미시장 무역장벽 뚫어라” FTA급 협정 추진

(브라질·아르헨티나·우루과이·파라과이)

韓-메르코수르 4개국 TA협상 개시

산업부, 5일간 우루과이 방문

“상품·서비스 등 모든분야 협상
우리 기업들 남미 접근성 개선”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등 남미의 거대 신흥경제권과 교역 및 투자 확대를 위한 협상의 첫걸음이 시작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나라와 메르코수르(MERCOSUR) 4개국과의 무역협정(TA) 제1차 협상이 이달 11일(현지시간)부터 15일까지 5일간 우루과이의 수도인 몬테비데오에서 열린다고 10일 밝혔다.

메르코수르(MERCOSUR)는 브라질·아르헨티나·파라과이·우루과이·베네수엘라 등 5개국으로 구성된 남미공동시장(Mercado Comun del Sur)으로 한-메



지난 5월 25일 서울 강남구 파르나스 서울호텔에서 열린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 협상개시 공동선언서 서명식’에서 김현중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협상개시를 공식으로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TA 협상은 회원국 의무 불이행으로 자격 정지 상태인 베네수엘라를 제외한 4개국과 진행된다. 무역협정(TA)은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효력을 발휘한다.

이번 협상은 지난 5월 25일 서울에서

양측 통상장관이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TA) 협상 개시를 선언한 이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공식협상이다.

우리는 김기준 산업부 자유무역협정(FTA) 교섭관을 수석대표로 산업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이 참석하며, 메르코수르는 우루과이 발레리아 수카시(Valeria Csukasi) 외교부 국장(의장국 수석대표) 등 4개국 수석대표 및 관계부처로 구성된 각국 정부대표단이 참석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협상에서는 상품, 서비스, 투자, 전자상거래, 위생검역(SPS), 무역기술장벽(TBT), 경쟁, 정부조달, 지속가능발전, 협력, 분쟁해결, 총칙 등 모든 분야의 협상이 심도 깊게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메르코수르는 남미지역 인구의 약 70%인 2억9000만 명의 인구에 남미지역 국내총생산(GDP)의 76%(2조8000억 달러)에 달하는 거대 신흥시장으로 미국, 유럽연합(EU) 등 주요국과의 무역협정 체결 사례가 없고, 높은 관세·비관세 장벽을 유지하고 있다. 때문에 우리 정부는 향후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TA) 체결을 통해 남미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의 경쟁

력 제고 및 수출 증대를 기대하고 있다.

더욱이, 향후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TA) 체결시 기존 북미 및 일부 중남미 지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을 남미까지 확대해 미주지역의 대부분을 연결하는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우리 정부는 협상과정에서 상품·서비스·투자, 규범 및 비관세장벽 등 모든 분야에서 우리기업들의 남미시장 접근성 개선을 추구하는 한편, 국내 산업의 민감성을 고려하기 위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하고 협상과정에서 산업계의 입장을 적극 반영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 교섭관은 “성장 잠재력이 높은 메르코수르 국가들과의 무역협정을 통해 남미 시장 교역과 투자 환경을 개선하고, 우리 기업의 수출 증대와 투자 진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세종=최신용 기자 grandtrust@metroseoul.co.kr

산업단지 내 PC방·유포 등 편의시설 늘린다

산업부, 지원시설 범위 대폭 확대
투자유치 촉진 이익 환수비용 감면

정부가 산업단지 내 청년노동자들이 원하는 편의시설을 대폭 확충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에서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3월 발표한 ‘청년 친화형 산업단지 추진방안’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0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살펴보면 우선, 노동자들이 편리하게 근무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지원시설의 범위와 비율을 대폭 확대했다.

지원시설구역 내 특별히 제한할 필요가 있는 업종(카지노, 유흥주점 등)을 제외한 나머지 업종들의 입주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네거티브 업종규제 방식’을

도입해 산업단지 내 PC방, 노래방, 유포(Pub), 사우나 등 다양한 지원시설이 들어올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또한, 청년들이 선호하는 IT·지식산업 등의 비중이 높은 지식산업센터에 입주 가능한 지원시설 비율을 현행 20%에서 30%로 확대하고, 복합구역 안의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지원시설이 최대 50%까지 입주할 수 있도록 해 산업단지에 지원시설이 충분히 입주되도록 했다.

다음으로 산업부는 산업단지 내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민간투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사업시행자에게 부과되는 개발이익 환수 비용을 감면하는 내용을 법률에 명시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오래된 산업단지일수록 생산기능 위주로 설계돼 어린이집·체육관·주차장 등 편의시설 및 공공시설이 부족하지만 이를 정부 재원으로 확충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민간투자 유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개발이익 환수 비용 등이 투자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해 그동안 산업단지에 투자하는 것을 망설이는 사례가 많아 지역에서는 이에 대한 개선요구가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산업부는 상대적으로 사업성이 부족한 비수도권 지역에서 시행되는 구조조도화사업의 경우 개발이익 환수비용의 50%를 감면하고, 산업단지 토지용도를 복합구역으로 변경할 경우 실제로 용도변경이 이뤄지는 부분에 대해서만 개발이익을 산정하도록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 다양한 의견수렴과 함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 제반 절차를 거쳐 올해 말까지 법 개정 등 완료할 계획”이라며 “규제개선과 함께 편의시설 확충사업 등 산업단지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도 적극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최신용 기자



러시아 향하는 이낙연 총리

이낙연 국무총리가 10일 오후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환승인사들과 함께 공군 2호기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바이오 증유’ 내년부터 석유 대체 사용

산업부, 석유사업법 규칙 개정 추진
‘음식점 폐기물’은 증유 대체 연료로

현재 재활용이 안돼 버려지는 음식점의 삼겹살 기름이나 폐음식물 기름 등이 앞으로 화력발전소에서 증유(병커-C유)를 대체하는 연료로 사용될 전망이다.

또한 미세먼지 저감, 온실가스 감축 등 환경개선과 에너지 전환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현재 시범보급 중에 있는 바이오증유가 내년부터 전면 보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발전용 바이오증유를 석유대체연료로 인정 후 전면 보급하기 위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 했다.

발전용 바이오증유는 동·식물성 유지(油脂), 바이오디젤 공정 부산물 등 미활용자원을 원료로 제조한 연료로 증유를 대체하는 연료다.

정부와 발전사들은 연료로서의 품질, 성능, 안전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2014년부터 발전용 바이오증유 시범보급사업과 실증연구를 추진해 왔다. 시범사업기간 중 5기의 증유발전소에 대해 실시한 실증연구 결과, 바이오증유를 발전용 연료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발전용 바이오증유가 상용화되면 그동안 발전사별로 지정된 증유발전기 5기

에만 바이오증유를 증유대체연료로 사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발전사가 운영 중인 14기 증유발전기 모두에 바이오증유를 발전용 연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석유관리원이 실시한 실증연구 결과에 따르면 바이오증유는 증유 사용 시 발생하는 배출가스로 미세먼지의 주범인 황산화물은 거의 배출되지 않으며 질소산화물은 증유 대비 39%, 미세먼지는 28%, 온실가스는 85% 저감되는 등 환경개선 효과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는 향후 관계부처 협의와 발전사, 바이오증유 생산업자 등 관련 업계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후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석유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급속한, 총발전량 등 바이오증유의 품질기준과 배출가스 등 성능평가기준을 올해 말까지 정해 고시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바이오증유가 본격 상용화될 경우 재생에너지원을 이용한 발전량이 증가함에 따라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의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뿐만 아니라 향후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최신용 기자

해수부, 어촌·어항 통합개발 추진

오늘 ‘어촌뉴딜300사업 설명회’

해양수산부는 11일 정부세종청사 6층 대강당에서 지자체 공무원과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어촌뉴딜300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어촌뉴딜300사업은 어촌의 혁신성장을 돕는 지역밀착형 생활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이다. 이를 위해 낙후된 선착장 등 어촌의 필수기반시설을 현대화하고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어촌·어항 통합개발을 추진한다.

이번 설명회는 어촌뉴딜300 사업대상지 선정에 관한 공고를 실시하기에 앞서, 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고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서는 어촌뉴딜300사업의 주요 내용과 2019년도 어촌뉴딜300사업대상지 선정계획을 발표한다. 이와 함께 공모 방법과 앞으로의 추진일정 등 공모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세종=최신용 기자

내일 ‘스마트국토엑스포’ 삼성동 코엑스에서 3일간

‘2018 스마트국토엑스포’가 오는 12일부터 14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스마트국토엑스포는 ‘모두를 위한 공간정보, 더 나은 미래’를 주제로 개막행사, 전시관, 컨퍼런스, 해외진출지원 및 비즈니스 미팅 등을 진행한다.

올해부터는 기업의 비즈니스 활로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창업자원을 적극 모색하기 위해 기업과 기업(B2B), 기업과 정부(B2G) 간 교류와 협력을 위한 프로그램을 강화했다.

개막식에서는 글로벌 초정밀 지도회사 ‘히어 테크놀로지스(HERE Technologies)’의 마이클 청 동북아 총괄부장이 ‘개발형 위치기반 플랫폼을 통한 자율 미래 활성화’를 주제로 기조연설에 나선다. 캄보디아의 하스 번트 위원장을 비롯한 20여개 나라의 정부 대표단과 세계 석학들도 참석한다.

/세종=최신용 기자